






보 도 자 료

보도일시	'19.9.3(화) 09:00	배포일시	'19.9.2(월) 15:00
	정책개발부 나채목 과장, 이선아 사무관(02-397-1350, 1323)		
	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김상용 과장, 이지영 서기관 (044-202-7404, 7406)		
	문화체육관광부 미래문화전략팀 김선아 팀장, 곽신석 사무관(044-203-2391, 2396)		
	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이울범 과장, 정수명 사무관 (044-201-6701, 6711)		
	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이한철과장, 김도현 서기관 (044-203-4550, 4551)		

“일자리에 아이디어를 더하다! 일자리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다!” - 제12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-

-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9월 3일(화),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2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, 「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」, 「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·일자리창출 방안」, 「환경 분야 일자리창출 방안」, 「디자인 주도 일자리창출 방안」, 「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(안)」을 상정·의결했다.
 - 일자리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, 지역주도의 일자리정책을 지원하는 등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.
 - 또한, 일자리위원회는 그간 일자리 현안대응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,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추진해왔다. 특히, 이번 12차 회의에서는 문화·환경·디자인 등 그동안 회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의 창의적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였다.
- 이번 12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.

I.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

- 정부는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참여하여 상향식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「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」을 마련한다.

① 지역 주도

- 「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」 공모사업을 운영하여 고용위기 우려 지역이 주도적으로 ‘중장기 일자리사업’을 추진하여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 - 기초자치단체, 기초 간 또는 광역-기초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, 연간 30~200억 원을 지원*한다.

* 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 지역 산업정책과 연관한 일자리사업 중 기존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의 지원이 불충분한 사항을 패키지로 지원

- 이를 통해, 고용위기 ‘前’ 단계 지역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를 메꾸고, 하향적 일자리사업 방식을 탈피하여 일자리정책의 현장감과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다.

- 또한, 「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*」,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비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지역의 자율적인 일자리목표 달성을 지원한다.

*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일자리목표와 대책을 수립·공시하고 추진하는 사업(10년~)

② 중앙 지원

- 노·사 대표, 전문가, 정부가 모여 고용정책을 논의하는 「고용정책심의회*」에 「지역고용전문위원회」를 설치하는 등 지역고용정책 심의를 강화하여 지역 일자리문제 해결의 협업 기구로 운영한다.

* 「고용정책기본법」에 규정 ▲(위원장)고용노동부장관 ▲(위원)노·사 대표, 전문가 및 전국 시·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, 관계부처 차관급 등 30명 이내로 구성

- 또한, 권역별 「일자리정책 자문단」을 운영하여 전문가 활용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에 정기적으로 자문단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을 운영하는 등 지역고용 역량을 강화한다.

- 더불어 '유형별 지역고용 사례'를 모델화하고 전국에 확산하여 지역 단위 일자리사업 개발 컨설팅에 활용할 계획이다.

③ 인프라 구축

- 「지역고용심의회(=지역노사민정협의회*)」는 일자리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, 법령상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**하고

- * ▲(위원장)자치단체의 장, (위원)노·사 대표, 전문가,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의 장
▲(기능)지역일자리 창출, 인적자원 개발, 노사관계 안정 등의 사항 협의심의

- ** 예) ▲국비지원 30억원 이상 일자리사업 계획 수립·시행 ▲지역일자리목표 공시 관련 사항 추가 (「고용정책기본법」 시행령 개정 사항)

- 지역 산업계 참여 지역일자리사업·훈련 수행·지원기구인 「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」를 고용정책 관련 전문위원회로 활용*하는 등 전문위원회를 활성화한다.

- *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시행령 제15조 개정 중, ~'19.하

- 또한, 「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」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운영개선 TF*를 구성하여 연내 운영 세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며,

- 지역 주력산업(산업부, 중기부, 지자체) 클러스터와 연계된 일자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주력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고용정책을 추진한다.

- 한편, 여러 법*에 흩어져있는 지역고용 관련 규정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

- * 「고용정책기본법」, 「고용보험법」,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, 「사회적기업법」 등

- 지역 일자리사업과 「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고용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역 고용정책 추진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.

II.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·일자리 창출방안

- 정부는 '일과 삶의 균형' 중시 등 국민의 문화(여가) 수요 증대에 맞춰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을 특화 육성하여, 생활 밀착형 문화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.

- 고용 친화성과 지역 친밀도가 높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여, 문화 분야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,

- 문화·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지역·주민·사회적 경제 조직이 기획·운영에 참여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한다.

① 문화 분야 특화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합니다.

- 문화 분야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('19.하반기)하고, 분야별 전담 중간 지원조직을 운영한다.



- 이를 통해,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, 성장·성숙기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, 관광두레 주민사업체('18년 367개 → '22년 1,125개 목표) 등 문화 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을 집중 육성한다.

- * [문화예술] (예비) 15백만원 이내, (초기) 50백만원 이내, (성장) 80백만원 이내 / 각 10팀 내외 [스포츠] 창업준비부터 3년 미만 대상 창업 보육 및 15~40백만원 차등 지원 [관광] (1년차)주민사업체 발굴 사업계획 수립 (2년차) 창업사범사업 운영 (3년차) 운영경영 지원

- 문화예술 분야 창업 실패 극복사례 교육('19년~, 5개 권역 총 250여명), 스포츠 분야 현장실습 등 창업교육과 관광두레 피디(PD) 육성('19년 70명)을 통해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.

- 또한 문화서비스로 창출되는 **사회적 성과에 대한 측정체계를 마련**하고,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조직의 **금융 접근성을 제고**하기 위해 **법·제도를 지속 개선**해나간다.

* ▲ 사회적기업 등을 관광사업체로 편입하여 관광기금 금융지원 혜택을 받도록 「관광진흥법」 개정(~'20.상반기), ▲ 사회적기업 주 업종인 스포츠서비스업·체육용구생산업 용자 우선 배정, ▲ 중소 관광사업체 신용보증지원제도 도입('19년) 등

② 지역·주민·사회적경제가 함께 문화를 창출합니다.

- 프리랜서 예술인과 은퇴선수들의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**혁신적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**하고, **창업·경영을 지원**한다.

* 기재부 '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·확산' 및 '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' 사업과 연계

- 지역 유희시설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**'문화재생'**과 **2018 평창동계올림픽** 시설 사후 활용 등 국제경기대회 **유산 확산**을 위해 **지역 주민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확대**해나간다.

- 다양한 **문화·체육시설과 생활문화프로그램**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**기획·운영 참여**를 유도한다(가점, 운영자격 부여).

- '1시군구 1스포츠클럽'을 추진('19년 97개소 → '22년까지 229개소)하고, **설립·운영에도 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**하도록 지원한다.

* 지도자 인건비·운영비 등 지원과 지원 종료 후 (예비)사회적기업으로 연계·지정

③ 연대와 협업으로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 합니다.

- 문체부, 중간지원조직, 관계기관,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참여하는 **'문화 분야 사회적경제 협의체'**를 운영하고 **다각적 협업**을 확대한다.

- 공공 박람회 참가, 단계별 맞춤 컨설팅(80여개) 등 **공공판로 개척**을 지원하고, **우수성과 공유, 매체 홍보**를 통한 대국민 인식 제고한다.

-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책을 발전시켜 문화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**맞춤형 지원**을 제공하고, **주민이 일상에서 참여**하고 **누리는 문화 서비스와 양질의 문화 일자리**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.

III. 환경 분야 일자리창출 방안

- 최근 대두되는 **폐기물·미세먼지·물 분야 환경현안 해결과 환경산업 육성성과가 환경일자리 창출과 연계**되도록 대책을 마련한다

① 청년이 도전하는 전문일자리 창출

- 통합환경 컨설턴트, 미세먼지 예보·분석, 환경측정분석사 등 전문성 높은 일자리를 제도화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.

* 통합환경허가 시행에 따른 컨설팅 수요 급증('19~, 300명 이상), 환경측정분석사 채용 의무화('20.7~환경시험검사법 시행에 따라 총 520명 이상)

- 또한,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폐기물에 새생명을 불어넣는 업사이클 전문기업 육성을 위하여 전과정지원 플랫폼 구축, 개별기업 맞춤형 지원 제공, 거점형 센터 구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.

② 환경현안 해결형 일자리 창출

-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재활용 시장 안정화, 미래폐자원 재활용 체계 마련 등 재활용 산업을 지원하고, 전처리·소각·매립 시설과 같은 폐기물 SOC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.

* 재활용 비축기지('20년 신규, 104억원), 국가폐기물처리시설 설치('20년 신규, 20억) 등

- 또한, 농촌·해양·하천 등 접근이 어려운 폐기물 수거·관리 사각지대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이다.

* 5대강 환경지킴이, 하천하구 쓰레기정화, 바다환경지킴이 등('19년 813명→'20년 1,919명)

- 붉은 수돗물과 같은 상수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지방상수도에 수질·수량을 실시간으로 자동 측정·감시하는 **스마트시스템**을 구축하는 한편, **땅꺼짐 사고 등을 예방**하기 위해 **노후SOC**를 정비하는 사업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.

*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: 161개 지자체 대상 총사업비 1.37조, '20년 사업비 6,715억원

- 지역별 환경관련 유희인력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단을 운영하는 한편(19~, 1,000명), 수도권 최대 배출원인 수송부문 감축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및 설비 구축등을 통해 시장수요를 창출하고, 미세먼지 저감하는 유망 기술이 시장에서 활성화되도록 실증화 사업 등을 지원한다.

③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신규일자리 수요 창출

- 물산업클러스터(19.9~, 대구)를 중심으로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전주기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신규 기업 유치·매출 증대 등을 통해 직·간접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.
 - * 기업유치 목표 : '19년 24개소 → '22년 44개소
- 보호지역(습지, 생태경관보호지역 등), 도시지역 대상 생태계 복원 사업 등을 확대하고 관련 업계 포럼을 구성·운영(19.8~)하여 업 신설 등 사업기반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.
 - * 보호지역 복원 예산 확대('19년 37억 → '20년 94억),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신규추진('20년 13억원)
- 드론·IoT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오염원 감시사업*을 확대하여 환경산업의 혁신기술 도입을 유도하고, 금융 투자에 기업의 환경성을 반영하도록 추진하여 녹색금융 관련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.
 - * 소규모사업장 IoT 활용 굴뚝감시('20년 6억원), 녹조다발지역 센서활용 감시('20년 24억원)

④ 환경일자리 인프라 강화

- 신규 환경인력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, 일자리박람회 개최 등으로 온·오프라인으로 취업매칭을 지원한다. * 미세먼지·통합허가·화학안전 특성화대학원 신규 지정·운영('20년~)
-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영세한 환경기업에 창업부터 투자유치·사업화 지원·해외시장 진출 등 전주기 성장지원으로 고용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.
- 환경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경제적 자생력을 갖춘 사회적경제 기업도 적극 발굴·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이다.

IV.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

- 정부는 디자인 주도 혁신을 가속화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요자 중심의 사회·공공서비스를 확산시키기 위해 「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」을 마련·추진한다.

① 먼저, 디자인을 활용한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.

- 소비재 분야 **디자인 혁신유망기업 발굴·지원을 확대**하고, 기업 밀집 지역에 **제품개발센터**를 추가 구축해 위탁생산 기업 등의 자채상품 개발을 지원하며,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**전략적 R&D**를 통해 성과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.
 - * 디자인 혁신유망기업 240개社(~'22), 제품개발지원센터 2개소 추가 구축('20년), 디자인 R&D 지원 규모 437억 원('20년)
- 또한, **시제품 제작 전문기업의 성장**과 수요기업의 활용 확대를 지원하고, 대기업 은퇴자로 **디자인 혁신팀**을 구성하여 노하우를 전파하며, 중소기업 대상 **디자이너 파견**을 확대할 계획이다.
 - * 온라인 제조전문서비스 지원('20년 50개社), 디자인 혁신팀 구성(~'22년 800명), 제조기업 우수 디자이너 파견('20년 80명)

② 둘째, 사회·공적 영역에서의 디자인 활용을 확대한다.

- 디자인 주도로 **사회적기업을 고도화**(20년 60개社)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**공유가치 창출형 혁신 모델**을 디자인하며,
 - 고령화, 생활안전 등 **사회문제 해결형 디자인 지원사업**을 확대('19년 2건 → '20년 20건)해 디자인 기반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.

- 또한,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**청년 디자이너의 일자리를 창출**(‘20년 100명)하고,
 - 국민중심 정책개발추진단인 **국민디자인단*** 활용 확산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·공공 서비스 개발을 확산시킬 계획이다.
 - * 지자체가 분야별(보건, 의료, 안전 등)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국민디자인단 운영 매뉴얼 보급, 국민디자인단 과제 발굴 대상을 중앙·지자체 → 공공기관·공기업으로 확대, 국민공모 사회문제해결사업에 국민디자인단 적용 등
- 아울러, **청년 디자이너 인턴십** 추진(연 200명), 공공디자인 실무자 포럼 및 교육 개최, 어린이·청소년 **범용디자인 교육** 프로그램 보급, 생활 속 불편요소를 발굴하는 **국민 아이디어 공모** 등을 통해 공공디자인 인력을 양성하고 인식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.
- 이와 함께, **도시안내체계 개선** 및 **어린이 안전 통학공간 조성** 등 안전·편리·품격 있는 생활공간 조성을 확대(‘19년 5개소 → ‘20년 10개소)할 계획이다.

③ 끝으로, 디자인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한다.

- 미래차, 로봇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**혁신 상품을 기획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**하고, 공학·경영학 지식을 겸비한 **차세대 디자인 인재**를 양성해 예체능에 편중된 교육 환경을 개선하며, 해외의 **디자인 선도기업**에 대한 **인턴십**을 지원할 계획이다.
 - * 디자인 석·박사 200명(‘20~’24년), 디자인 융합 커리큘럼 개설(5개 대학), 글로벌 인턴 연 100명 등
- 아울러, 기업부설연구소 **산업디자인 연구 분야 인정범위를 산업디자인 전 분야로 확대**(‘20.上)하고 디자인계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**산업디자인 적정대가 산정기준** 및 **디자인 표준계약서**를 연말까지 제·개정할 계획이다.

-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은 “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노사가 **상생·협력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어렵다**”면서 “최근 현대차 노사가 8년만에 무분규 타결(잠정합의)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매우 의미가 크며, 특히 노사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**통상임금·최저임금 불확실성을 제거한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**”고 하였다.
- 또한, “**임금인상 및 통상임금을 두고 노사 갈등이 있었지만 한발씩 양보하고 오히려 540명의 신규채용에 합의한 부산교통공사도 공공 부문의 훌륭한 일자리 창출 사례**”라고 평가했다.
- 이날 회의에서는 ‘**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**’ 개설과 관련된 **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(안)**도 함께 보고되었다.

붙임 1**제12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개요**

- 일시: 9.3(화), 07:15~08:15(조찬 포함)
- 장소: 한국프레스센터(서울시 중구 세종대로)
- 참석대상: 부위원장(주재), 위원(당연직 15명*, 위촉직 13명**),
안전관련 부처 장관***
 - * 당연직: 기재·교육·과기·행안·산업·복지·고용·여가·중기부 장관
국조실장, 공정위원장, KDI·노동연·직업능력개발원장
 - ** 위촉직: 김주영(한국노총), 김명환(민주노총), 조돈문(비정규직), 박용만(상의), 손경식(경총),
김기문(중기협), 김영순(여성), 김원석(농업), 안건준(벤처), 김다혜(청년, 交替),
전용만(중고령, 交替), 김수영(지자체, 交替), 김재경(사회적경제, 新規)
 - *** 문체부 장관, 환경부 장관
- 안전(안)
 - ① 【의결】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<고용노동부>
 - ② 【의결】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·일자리 창출 방안 <문체부>
 - ③ 【의결】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<환경부>
 - ④ 【의결】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 <산업부>
 - ⑤ 【의결】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(안) <일자리위원회>
(개정사항: 「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」 개설)

 세부 일정(안)

시 간	내 용	비 고
07:15 ~ 07:17	개회 및 국민의례 (2')	* 사회: 일자리위 부단장
07:17 ~ 07:20	부위원장 모두말씀 (3')	* 모두말씀 이후 비공개
07:20 ~ 07:40	안전 보고 (20')	* 조찬 서빙 개시
07:40 ~ 08:10	토론 및 의결 (30')	
08:10 ~ 08:15	부위원장 마무리말씀(3') 및 폐회(2')	

 홍보계획

- (브리핑) ▲사전: 위원회 전일 15:00, ▲사후: 위원회 당일 08:35
- (보도자료) ▲제12차 일자리위원회 개최안내 메시지: 위원회 개최 전
▲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: 사전브리핑 시

붙임 2**사후 브리핑 계획**

- 일시/장소: '19.9.3.(화) 08:35 /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대화홀
- 참석자
 - (일자리위원회) 일자리기획단 부단장, 총괄기획관
 - (부처)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(김영중), 문체부 기획조정실장(오영우),
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(김동구),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(김정희)
 - ※ 고용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(김상용), 문체부 미래문화전략팀장(김선아),
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장(이울범), 산업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(이한철) 배석
- 브리핑 사항
 - 제12차 일자리위원회 주요 논의결과 설명 (일자리기획단 부단장)
 - ※ 별도 자료 배포 없음
- 진행 순서 (총 25분)

시 간		내 용	비 고
08:35~08:45	10'	주요 논의결과 설명	일자리기획단 부단장
08:45~09:00	15'	기자단 질의·응답	진행: 홍보팀장